



목차

- 1 연구목적과 방법
- 2 이론적 배경
- 3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실재
- 4 주요발견

Part 1

연구목적과 방법



- ‘권리의 난제’란 불평등·착취·문화훼손·환경파괴 등에 장기노출된 사회문제 의미
- 충남 서북부에 밀집된 산업시설은 주민거주환경과 안전 저해, 지역공동체 파괴
- 산업시설 초래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에 집중하는 전통적 접근방식 보완필요
- 인권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인권사회학적 접근으로 해결방안 모색



- 국제인권개념에 근거해 사회문제를 인권사회학적 이론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방식 필요
- 법제 이외 영역에서 다소 소홀하게 다뤄져 온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입증
- 환경과 인권의 중첩영역을 발굴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도출

조사방법과 대상

문헌조사	인권정전-환경권 분석, 연구자료, 정부보고서 및 웹사이트, 언론보도 등
면접조사	구조화된 질문지 사용, 눈덩이 표집

조사범위

시간	2021년 4~6월경
대상	이장,청년회장 등 마을 핵심지도층 및 지역 환경문제 전문가 등 11명
내용	지역주민 환경권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방안 모색

Part 2

이론적 배경

환경권의 규범적 정의와 전환

- 실체적 권리로서 환경권 규정 모호한 상태
- 국내법상 환경권 헌법 35조, 헌재 판례, 국가인권위 정의에 따라 인정되고 있으나 국가성장 이념 등 영향으로 의무 소극적 규정됨
- 현재 지구법학 담론에서 법제 한계 지적하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더불어 누릴 권리, 국가는 미래세대 책임으로서 환경오염과 훼손 예방하고 보전 및 향상' 책임 규정 보완 제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등 국회 계류중인 기후위기 대응법안에서도 기후위기 피해 평가해 정책 반영하고 사회적 안정망 설립 필요성 강조
- 국제적으로 환경권은 1992년 UNCED 기점으로 논의 확대, 현재 인도, 볼리비아 등은 자연의 법적 권리 인정

인권에서의 환경권과 그 종류

- 현대적 인권은 18세기 서구 사회계약 사상, 20세기 국제 인권장전으로부터 영향 받은 개념
- 카렐 바삭의 분류에 따라 인권은 3가지 세대별 범주로 인식 되어 왔으나 최근 인권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해가 확산
- 이러한 세대별 분류의 한계 보완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형성 되는 인권의 추동력 반영한 '인권정전' 활용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권과 관련된 인권정전인 세계인권 선언, 스톡홀름 선언, 리우 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프리카 헌장, 산살바도르 의정서, 오르후스 협약, UN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 인간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세계지구권선언을 분석하여 총 여섯가지의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범주를 제시. 범주 내 각 권리는 세대별 인권개념을 가로지르는 상호적 관계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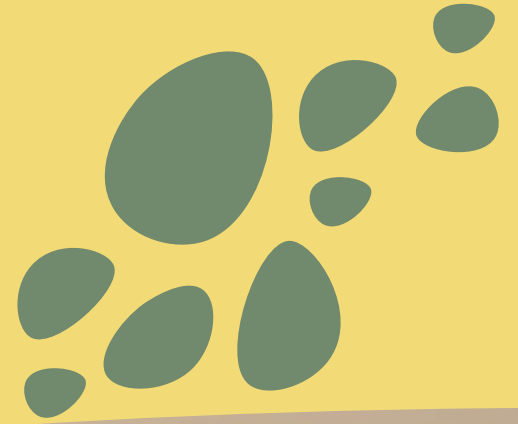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발전할 권리	만족스럽고 존엄한 환경 속에서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내용
지구와 생명공동체의 보호를 고려한 자원 이용	지구와 생명공동체를 보호하고 그러한 국가 기관 및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
환경재난에 대한 법적 구제 및 보상받을 권리	환경오염 피해의 책임과 배상에 대한 법제에 협력하고 강제되지 않음으로 보상 및 원조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
환경오염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저항할 권리	환경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의견을 표현할 권리,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환경과 인권에 대해 교육받고 정보에 접근할 권리	환경과 인권에 대해 교육받고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환경보호와 평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은 평등을 고려해야 하며 환경약자의 지속가능한 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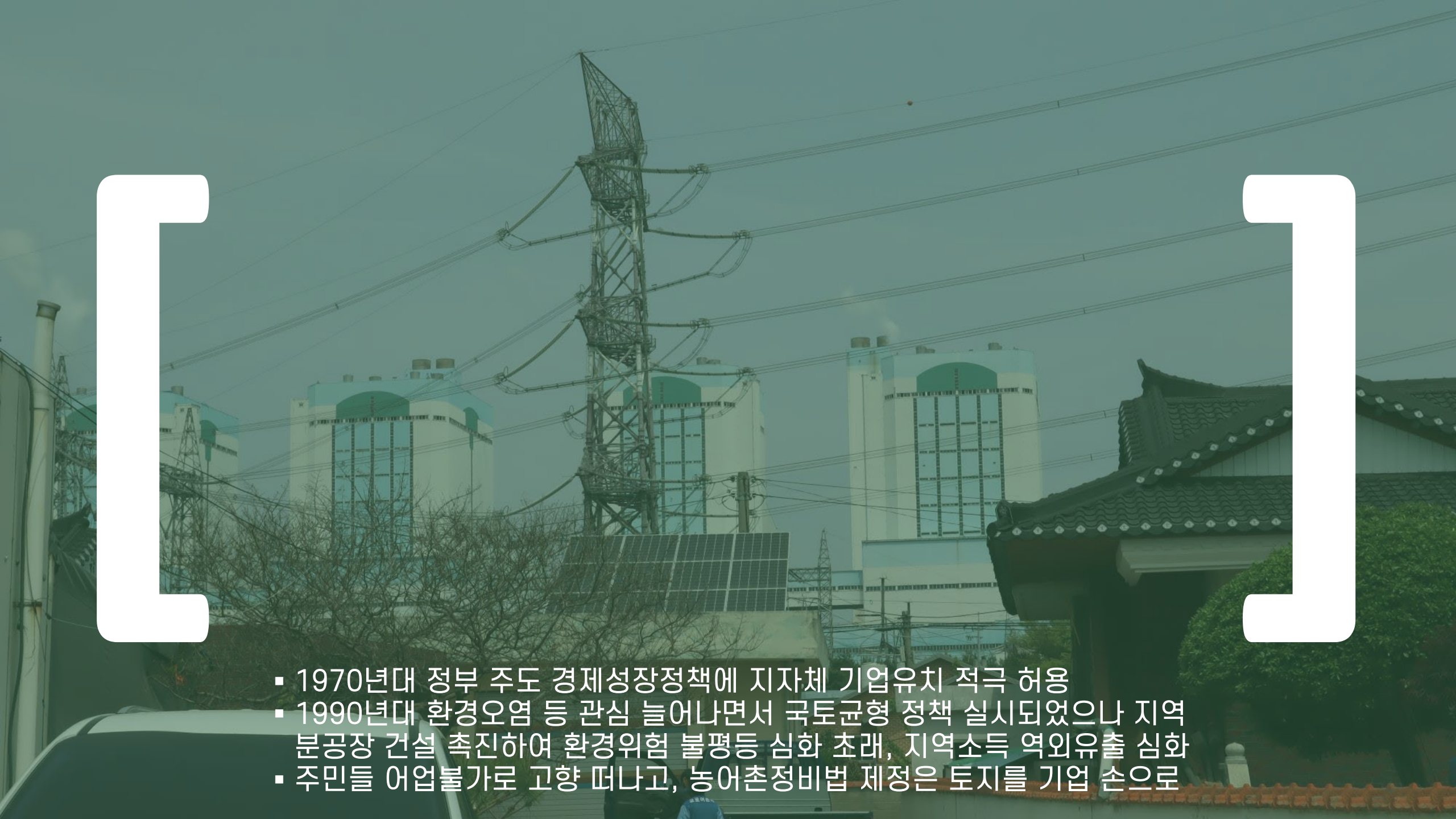
Part 3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발전할 권리

- 당진과 서산은 과거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어업수입이 많았던 지역
- 1970년대부터 간척사업 시작되고 산업시설 연달아 입주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가장 높은 충남, 그 중 당진 배출량은 29.1%
- 해양생태계 붕괴로 김, 미역 등 조류양식 불가, 폐수로 막심한 피해
- 대기오염, 대형수송트럭, 비산먼지, 송전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 및 건강 피해 심각

- 1990년대 아산만 광역개발계획 논의 초기부터 환경보전 필요성 인식 존재
- 그러나 당시 환경영향평가 등은 환경보호 고려와 실질적 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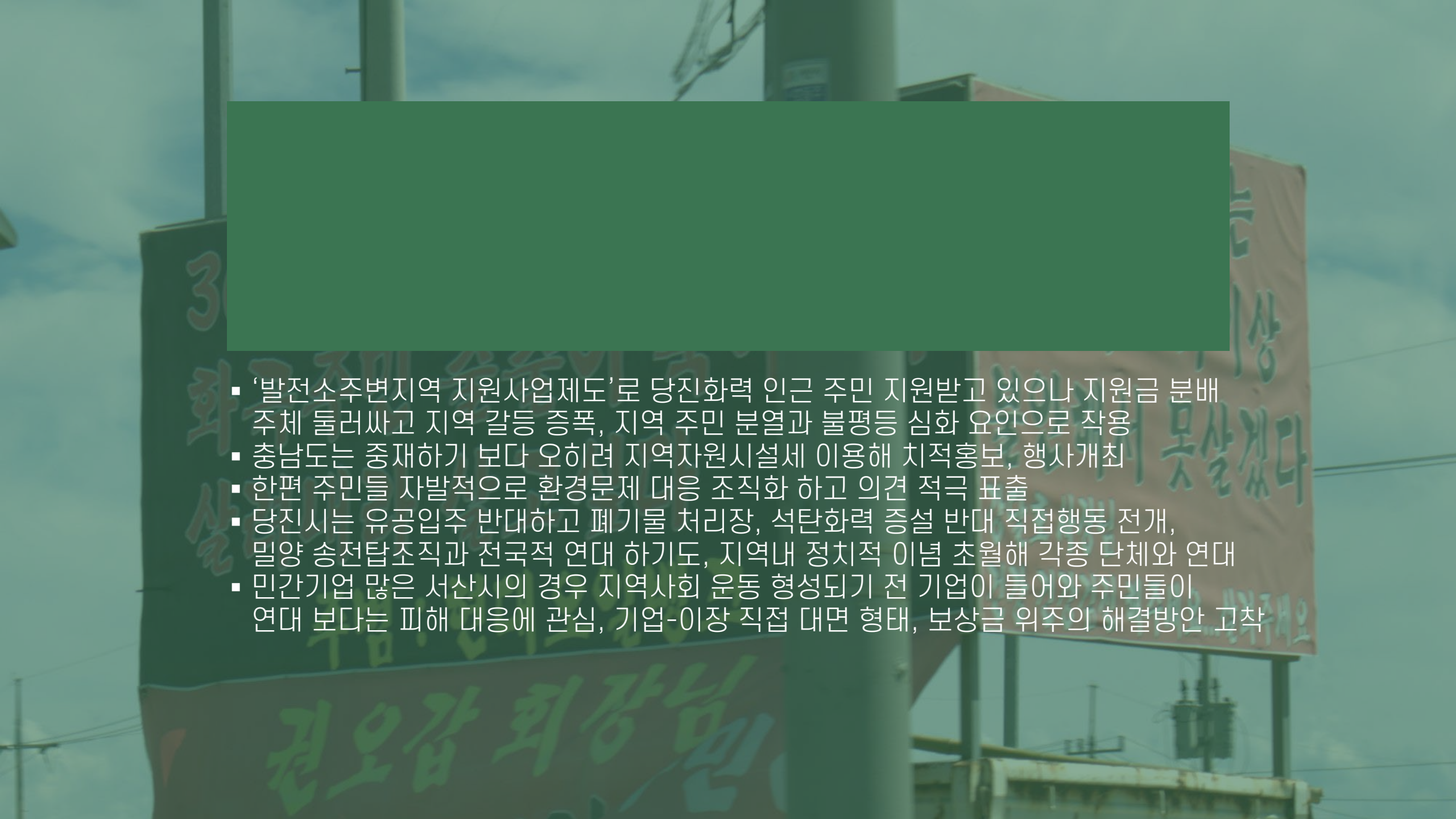
- 
- 1970년대 정부 주도 경제성장정책에 지자체 기업유치 적극 허용
 - 1990년대 환경오염 등 관심 늘어나면서 국토균형 정책 실시되었으나 지역 분공장 건설 촉진하여 환경위험 불평등 심화 초래, 지역소득 역외유출 심화
 - 주민들 어업불가로 고향 떠나고, 농어촌정비법 제정은 토지를 기업 손으로



- 권위주의적 사회분위기 아래 주민의견 표출 불가능
- 환경영향평가 진행됐으나 주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지 않았고 접근성 낮아
- 지역에는 기업 중심으로 한 식당, 일용노동 등 새로운 경제 생태계 형성
- 행정적 관리 이원화로 기업-주민 간 민간 차원 보상 컨트롤 할 거버넌스 능력 저조
- 금전적 배보상을 중심으로 한 토지보상 및 사고 대처는 지역 공동체 붕괴 촉진



- 산업시설 입주 시작한 1970년 말엽~2000년대 초까지 지역 주민 인식조사 기록 거의 없어
- 주민들 발전소 등이 미칠 영향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 얻지 못했고 초기에는 별다른 걱정 없었음
-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신뢰 매우 저조,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과학적 측량 뛰어넘기 때문
- 환경영향 평가 주관자가 조사 주체자 선정하고 비용 부담하는 제도적 한계는 불신 주요 원인, 평가가 환경위해요인 파악이 아닌 산업환경에 적절한 수행 공간인지 평가하는데 있다고 인식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제도’로 당진화력 인근 주민 지원받고 있으나 지원금 분배 주체 둘러싸고 지역 갈등 증폭, 지역 주민 분열과 불평등 심화 요인으로 작용
 - 충남도는 중재하기 보다 오히려 지역자원시설세 이용해 치적홍보, 행사개최
 - 한편 주민들 자발적으로 환경문제 대응 조직화 하고 의견 적극 표출
 - 당진시는 유공입주 반대하고 폐기물 처리장, 석탄화력 증설 반대 직접행동 전개, 밀양 송전탑조직과 전국적 연대 하기도, 지역내 정치적 이념 초월해 각종 단체와 연대
 - 민간기업 많은 서산시의 경우 지역사회 운동 형성되기 전 기업이 들어와 주민들이 연대 보다는 피해 대응에 관심, 기업-이장 직접 대면 형태, 보상금 위주의 해결방안 고착

Part 4

주요발견

1

-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에 알맞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제시
- 인권정전 분석하여 재산권, 생명권 등에 한정되었던 환경권 구체화, 외연 확장

2

- 인권 가해 주체로서의 국가, 가해의 매커니즘 형성하는 사회구조, 가해 수단이 되는 기업의 인권 의무와 책임 확인
- 성장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국가의 의도로 인권침해가 사회적 약자에 집중됨을 확인

3

- 인권문제의 구조적 분석을 통한 문제의 근본원인 파악
- 인권당사자에 환경권이라는 언어 부여하여 인권상황 진단 및 증진 방안 제시
- 인권운동과 환경운동의 통합 필요성 확인

“

”